

한양 “중앙공원 1지구, 롯데건설 무단 주주변경”

“고의 부도에 의한 금융사기” 주장 법원 제출 준비서면 내용 증거 공개 “공모지침 위반 광주시에 소송 제기” 롯데 “사실무근, 사업 예정대로 추진”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을 맡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광주시의 승인 없이 3차례 주주를 변경하는 동안 지역업체는 모두 퇴출됐다. 남은 것은 롯데건설이라는 대기업 뿐이다.”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한양이 “감독관청이자 공동 시행자인 광주시의 부작위로 공모사업 취지가 훼손되고 개발비리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한양은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투자사인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롯데건설의 우빈산업 주식 취득이 ‘고의 부도에 의한 금융사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우빈산업·롯데건설의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소심을 위해 지난달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준비서면에서 롯데건설은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SPC)에게 전달했다”고 명시돼 있다.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한양 박성빈 전무가 5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한양 제공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한양과 케이앤지스틸과의 주주권 소송을 앞두고 패소를 직감한 SPC와 롯데건설이 이를 타개할 대책으로 100억원을 대출해주고 재판 선고일을 만기일로 지정했다. 실제 해당 100억원의 대출 기한은 불과 22일이였다. 공교롭게도 SPC는 재판에 졌고 곧바로 100억원을 갚지 못해 부도를 냈다.

이에 ㈜한양 측은 이 서면을 통해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지난 11월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한양 측은 “롯데건설이 보유한 SPC 지분을 쪼개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하고 자신들의 SPC 지분을 29.5%로 만든 것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내부거래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광주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양 측은 “지역사의 참여와 ㈜한양의 신용 및 실적을 바탕으로 제안서 평가에서 가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SPC에서 2개의 지역사가 모두 퇴출되고, 사업자 선정 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한양의 대표주주간 사지위가 박탈된 것은 공모제도의 도입 취지를 완전 몰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해당 SPC는 광주시의 승인 없이 3차례 주주가 변경됐고, 지역업체 참여(3점) 등의 가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정작 최종적으로는 지역업체 모두 퇴출된 상태다.

광주시는 SPC 주주 변경과 관련 제안요청서 제3조를 근거로 ‘사업협약 체결 후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지분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양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특혜를 제공하고 시민의 이익을 배제한 시민 농단 사건”이라며 “강력한 시정이 없을 경우 공모지침을 위반한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앤지스틸은 더욱 강력한 어조로 “우리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이상 망설임 시간이 없다”면서 “조만간 광주시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정당한 지분 인수라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측은 케이앤지스틸의 주식탈취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신용공여 등을 통해서 1조원의 PF를 조달했으며, 3000억원이 부족한 상황 속 채무불이행(EOD) 당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보충요청을 받았다”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OD 다음날 SPC 채무 100억원을 대신 갚고 우빈산업의 SPC 주식(49%)에 설정해 둔 근질권을 실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롯데건설은 이어 “(한양측의) 횡방으로 인해 사업은 1년 넘게 장기 지연되며 대출이자·토지비 상승·금융위기 리스크 증가 등으로 광주시는 물론 광주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그 동안 수행해 온 사업 내용은 바뀔 것이 없는 만큼 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형 만원주택’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선정

행안부, 오늘 우수사례 경진대회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공급 호평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이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안부는 지난 10월부터 접수된 103개(광역시 16개·기초 8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고 13개 우수사업(광역시 2개·기초 11개)을 최종 선정했다.

시·도에서는 전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 사례와 경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사례가 나란히 선정됐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전남 16개 지역에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화순군의 경우 14대1의 높은 경쟁률(102세대 선발에 1435세대가 신청)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의 K-U시티 프로젝트는 경북지역 시군마다 대학을 유치하고 이를 지역 특

화산업과 연계해 경북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경북은 5년간 32조원의 기업투자를 유치했고 1만 7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시·군·구에서는 신안군을 비롯 인천 옹진군·경기 가평군·강원 철원군·충북 제천시·보은군·충남 예산군·전북 김제시·경북 청도군·경남 고성군·의령군의 사례가 뽑혔다.

행안부는 선정 배경에 대해 “선정된 사업들은 인구감소 대응을 추진한 성과와 실적이 우수한 것은 물론 다른 지역의 사

업·정책과도 연계 가능한 것으로 보여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최종 순위는 현장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순위에 따라 최우수상을 받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각각 3억5000만원과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며 행안부장관상도 수여된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가 확산돼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황지 기자

다양한 업종의 창업준비 모두!

제9회 제일 창업박람회 IN광주

12.14(목) - 16(토)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전등록하면 무료입장!
NAVER | 제일좋은전람
검색창에 제일좋은전람을 검색해보세요!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를 만나보세요!

참가문의 | T. 02-856-1402 E. goodfair@yesexpo.co.kr

제일좋은전람